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 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

# 목 차

## ■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 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소비 요인별 분해 방법 .....	2
3. 소비 요인별 분해 결과 .....	6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동   향   분   석   팀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소비 요인별 분해를 통해 본 최근 소비지출 특징 - 평균소비성향 복원이 소비 개선의 핵심

#### ■ 개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지출 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계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계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과거 시점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최근 소비지출 변동의 특징

가계의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취업, 임금상승률, 최저임금정책, 경기변동, 정부정책 등이다.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분배구조, 주거비 변화, 고령화 정도, 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소비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① 소득변동 효과와 ② 소비성향변동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은 과거 5년간(2005~2010년)의 소비지출 변동 요인과 최근 5년간(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 요인의 변화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가계의 소비가 부진한 것은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된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컸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4.1%에서 2011~2016년 1.3%로 낮아졌다.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기간에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은 소비성향이 급락하며 전체 소비지출을 끌어내렸다.(전체 가구 소비성향변동 기여도 2005~2010년 -0.2%p→2011년~2016년 -1.6%p). 최근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전반적으로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매우 컸다. 저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 중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1.0%p에서 2011~2016년 -2.7%p로 크게 확대되었다. 중간소득 가구의 2011~2016년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3%p였으며 고소득 가구는 동기간 -0.9%p로 아직 크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들이 주거비 부담, 소득불확실성, 고령화 심화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간소득(2~4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소비지출이 위축된 측면이 강하다. 중간소득 가구는 2005~2010년 소비지출 상승률이 연평균 4.3%에서 2011~2016년 1.1%로 크게 둔화하였다. 소득변동 기여도가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4.9%p로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1~2016년에는

3.3%p로 크게 낮아졌다.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연령별 특징을 살펴볼 때 과거에는 소비성향 감소 효과는 고령층(60대이상) 가구에서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등 모든 연령대로 퍼지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소비성향 하락이 소비를 크게 제약하고 있었다.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과거에는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5년간에는 기여도가 각각 -1.9%p, -1.5%p로 확대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부담이 점차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장년층과 중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누증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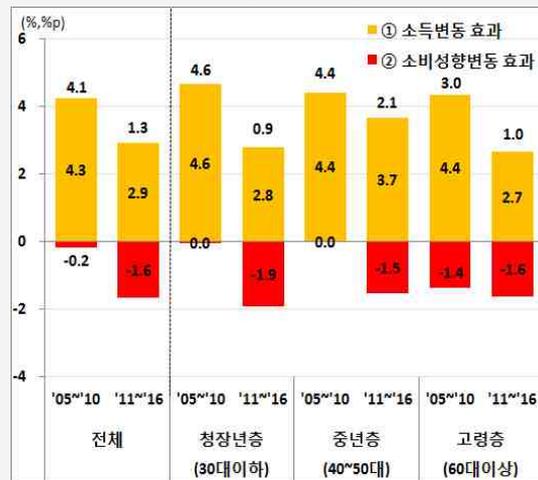
다섯째, 청장년층(30대이하) 가구는 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며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락하였다. 청장년층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과거 5년간(2005~2010년) 4.6%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최근 5년간(2011~2016년)에는 0.9%로 가장 낮아졌다. 소득변동과 소비성향변동 모두 소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 가계 소비지출 변동 기여도 분해 (소득수준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가계 소비지출 변동 기여도 분해 (연령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시사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뿐 아니라 최근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령인구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 비중을 높이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 채무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안정을 유도하여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1. 개요

○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국내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

-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Income-led Growth) 성장이 주목받고 있음

- 소득주도 성장이란 노동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증대되어 유효수요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하였으며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노동분배율 개선, 실질임금 상승률 증가 등을 유도할 계획

-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함

-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지출 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 등의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소득 주도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가계의 소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리면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비를 소득변동 측면과 소비성향변동 측면으로 분해하여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최근 5년간(2011~2016년) 소비지출 변화를 소득변동 측면과 소비성향변동 측면으로 나눈 이후 지난 5년간(2005~2010년)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분석

- 추가로 소득계층별(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연령별(30대이하, 40~50대, 60대이상)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의 요인별 차이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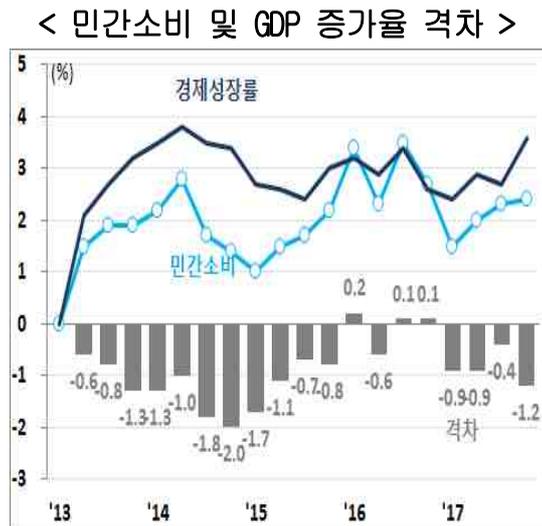
## 2. 소비 요인별 분해 방법

### ○ 국내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2.8%였으며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2%에서 2016~2020년 2.7%,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sup>1)</sup>
- 특히 민간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밀돌고 있음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을 밀돌았으며 2017년 역시 경제성장률을 밀돌 것으로 보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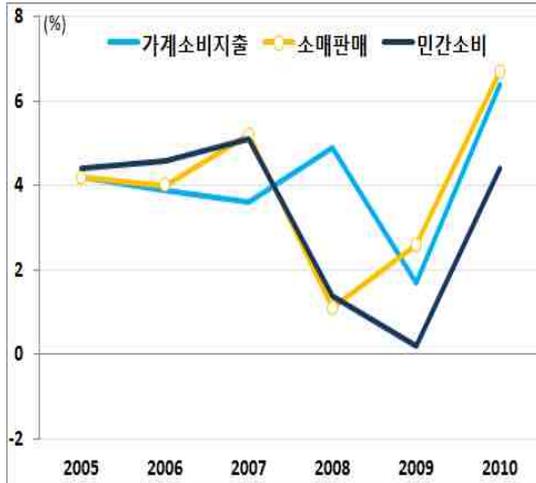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둔화
  -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0년 3.1%에서 2011~2016년 2.0%로 1.1%p 둔화
  - 소매판매액지수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2005~2010년 3.9%에서 2011~2016년 2.7%로 1.2%p 낮아짐

1)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2016.1)”,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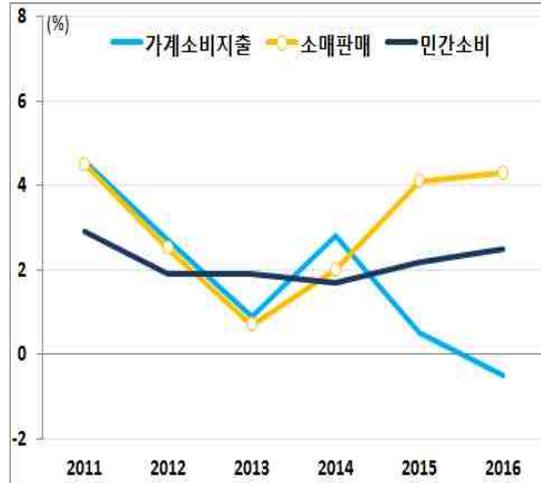
- 가계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2005~2010년 4.1%에서 2011~2016년 1.3%로 2.8%p 낮아졌음

< 민간소비, 소매판매 변동(2005~2010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민간소비, 소매판매 변동(2011~2016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의 소비는 소득과 평균소비성향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소득 변화는 가구원 특성변화, 가구외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평균소비성향 변화는 소득분배구조, 주거비 변화, 고용안정성, 고령화 현상 등에 영향을 받음

- 가계의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이 높아질 경우 가계가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므로 소비가 늘어남
  - 자신의 소득 중 얼마나 소비에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 역시 가계의 소비에 중요

$$\text{소비지출} = \text{가처분소득} \times \frac{\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

① 소득                      ② 평균소비성향

-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원 특성 변화와 가구 외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짐

-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거나 가구원의 취업이나 은퇴 등은 가구소득의 변화를 가져옴
- 가구 외적 요인은 근로소득(임금상승률, 최저임금제, 경기변동 등), 사업소득(매출변동, 사업비용 변동 등), 재산소득(임대료, 이자율, 배당률 등), 경상이전소득(정부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

< 소득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주요내용
가구원 특성 변화	- 취업 - 은퇴 - 가구원 연령 변화
가구 외적 요인	- 근로소득 : 임금상승률, 최저임금정책, 경기변동 - 사업소득 : 매출변동, 사업비용 변동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율, 배당률, 사업비용 변동 - 경상이전소득 : 정부정책

-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분배구조, 주거비 변화, 고령화 정도, 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으로 알려져 있음
-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이 취약해 질 경우 평균소비성향 낮아질 가능성
- 주거비용 급증에 대한 불안감 확대, 노후생활 의료비 급증 및 경제적 불안감 고조, 실직 및 이직으로 인한 미래소득 불안 증가
- 가계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늘거나 미래 경기 불확실성 증가 역시 가계가 소비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이유

<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요인	내용
소득분배구조	- 한계소비성향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이 취약해 질 경우
주거비 부담	-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주거비에 대한 불안감 확대
고령화 정도	- 노후생활 의료비 급증 및 경제적 불안감 고조
일자리 불안	- 실직 및 이직으로 인한 미래소득 불안 증가
가계부채	- 미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경제 불확실성	- 미래 소득, 경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소비를 연기

- 가계의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 요인인 ① 소득변동 효과와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요인인 ② 소비성향변동 효과로 분해하여 값을 비교
  - 비교 대상은 2005~2010년 소비지출 변동과 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 요인이며 각 값을 기여도로 변환
  - 2005~2010년 소비지출 변동은 2010년 가처분소득에 2005년 평균소비성향을 곱한 값과 2005년 소비지출의 차이를 소득변동 효과로 2010년 소비지출과의 차이를 소비성향변동 효과로 정의
  - 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은 2016년 가처분소득에 2011년 평균소비성향을 곱한 값과 2011년 소비지출의 차이를 소득변동 효과로 2016년 소비지출과의 차이를 소비성향변동 효과로 정의
-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요인별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로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 분석을 시행
  - 소득수준별로는 가계를 저소득층(소득1분위), 중간소득층(소득2~4분위), 고소득층(소득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
  - 연령별로는 가계를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고령층(60대이상)로 구분하여 분석

< 기간별 소비지출 변동 분해 방법 >

	2005~2010년 소비지출 변동 분해	2011~2016년 소비지출 변동 분해
처음 연도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sub>2005</sub> × 평균소비성향 <sub>2005</sub> (A)	가처분소득 <sub>2011</sub> × 평균소비성향 <sub>2011</sub> (A)
소비성향 고정 시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sub>2010</sub> × 평균소비성향 <sub>2005</sub> (B)	가처분소득 <sub>2016</sub> × 평균소비성향 <sub>2011</sub> (B)
마지막 연도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sub>2010</sub> × 평균소비성향 <sub>2010</sub> (C)	가처분소득 <sub>2016</sub> × 평균소비성향 <sub>2016</sub> (C)
분석기간 소비지출 변동	(C) - (A)	(C) - (A)
① 소득변동 효과	(B) - (A)	(B) - (A)
② 소비성향변동 효과	(C) - (B)	(C) - (B)

### 3. 소비 요인별 분해 결과

○ (전체가구)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가계 소득증가 속도 둔화보다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주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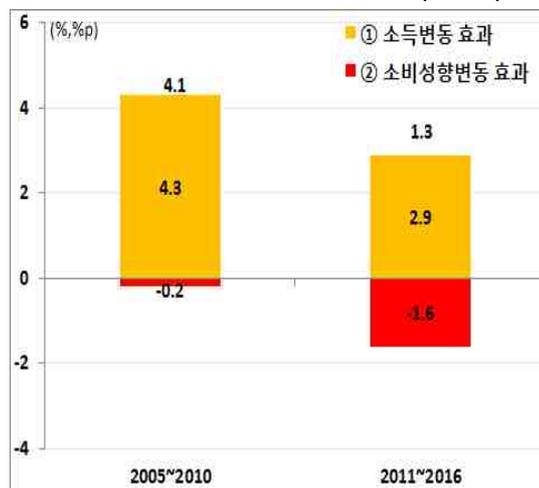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1.3%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4.1%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폭이 2.8%p 축소
  - 최근 5년 동안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239.3만원에서 2016년 255.0만원으로 연평균 1.3% 늘어나는 데 그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이 187.2만원에서 228.7만원으로 연평균 4.1%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됨
-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 중 소득변동 기여도는 4.3%p(2005~2010년)→ 2.9%p(2011~2016년)으로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0.2%p(2005~2010년)→ -1.6%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가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4.1%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3%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0.2%p로 크지 않았음
  - 2011~2016년 연평균 가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1.3%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2.9%p였으며 소비성향하락으로 인한 기여도가 -1.6%p로 확대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전체)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전체)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득분위별)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등 모든 소득계층에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지출을 제약하였으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효과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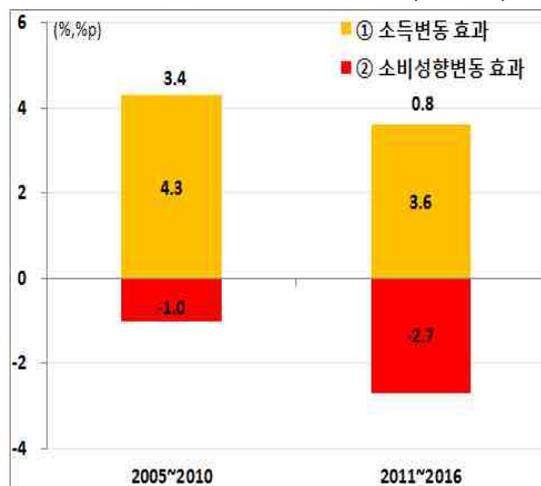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저소득(소득1분위)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은 0.8%로 과거 5년(2005~2010년) 간 3.4%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 폭 축소
  - 최근 5년 동안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121.9만원에서 2016년 126.9만원으로 연평균 0.8% 늘어나는데 그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이 97.6만원에서 115.1만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음
- 저소득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3%p(2005~2010년)→3.6%p(2011~2016년), 소비성향 변동 효과는 -1.0%p(2005~2010년)→-2.7%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저소득 가계 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3.4%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3%p였으며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1.0%p임
  - 2011~2016년 저소득 가계 소비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0.8%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3.6%p로 비교적 높았으나 소비성향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2.7%p로 매우 컸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1분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1분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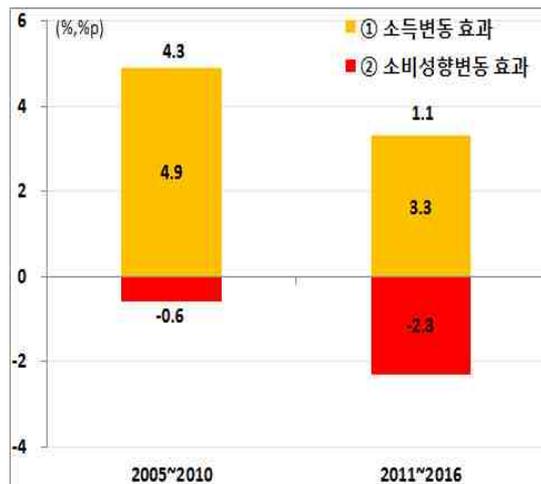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중간소득층(2~4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4.3%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폭 축소
  - 최근 5년 동안 중간소득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237.1만원에서 2016년 249.9만원으로 연평균 1.1% 늘어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이 181.0만원에서 223.3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음
- 중간소득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9%p(2005~2010년)→3.3%p(2011~2016년), 소비성향 변동 효과는 -0.6%p(2005~2010년)→-2.3%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중간소득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인 4.3%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9%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0.6%p이었음
  - 2011~2016년 중간소득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인 1.1%p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3.3%p였으며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2.3%p이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2~4분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2~4분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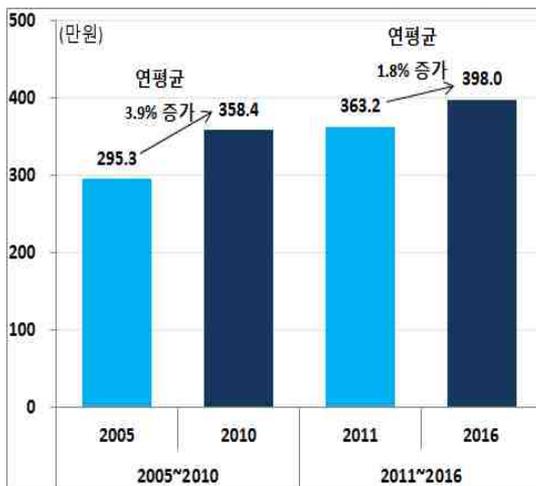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고소득층(소득5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1.8%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연평균 3.9%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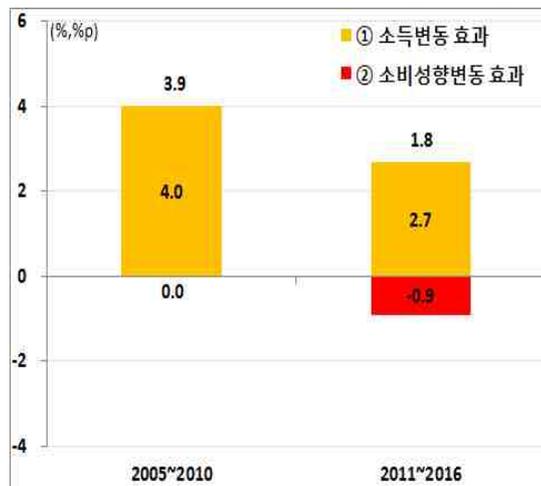
- 최근 5년 동안 고소득층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363.2만원에서 2016년 398.0만원으로 연평균 1.8% 늘어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이 295.3만원에서 358.4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듦
- 고소득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0%p(2005~2010년)→2.7%p(2011~2016년), 소비성향 변동 효과는 0.0%p(2005~2010년)→ -0.9%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고소득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3.9%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0%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거의 없었음
- 2011~2016년 고소득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1.8%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2.7%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0.9%p이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5분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5분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연령별) 고령가구는 소비성향 변동 효과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청장년층과 중년층 가구도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30대이하 청장년층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0.9%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4.6%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 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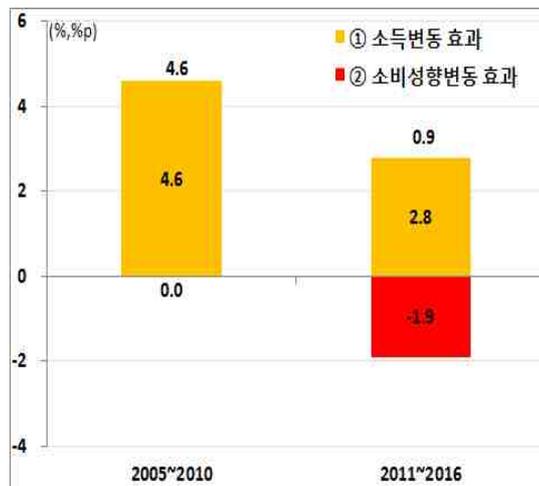
- 최근 5년 동안 청장년층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246.5만원에서 2016년 257.7만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가계의 소비지출이 186.5만원에서 233.7만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듦
- 청장년층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6%p(2005~2010년)→2.8%p(2011~2016년), 소비성향 변동 효과는 0.0%p(2005~2010년)→ -1.9%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청장년층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인 4.6%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6%p로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거의 없었음
- 2011~2016년 청장년층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인 0.9%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2.8%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1.9%p이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30대이하)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30대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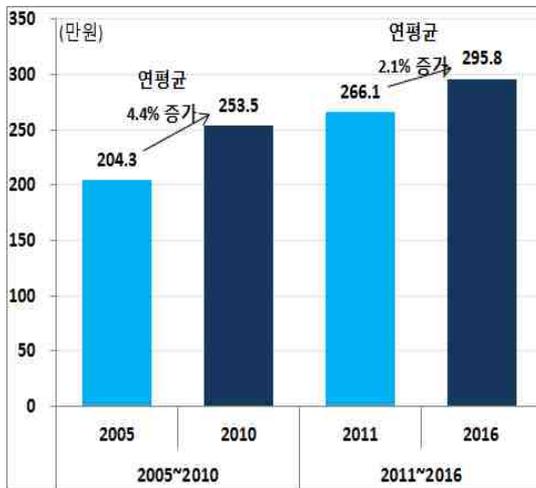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40~50대 중년층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4.4%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폭 축소
- 최근 5년 동안 중년층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266.1만원에서 2016년 295.8만원으로 연평균 2.1% 늘어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중년층 가계의 소비지출이 204.3만원에서 253.5만

원으로 4.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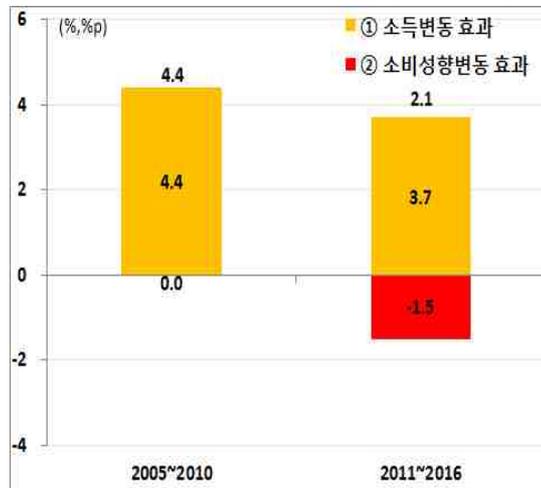
- 중년층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4%p(2005~2010년)→3.7%p(2011~2016년), 소비성향 변동 효과는 0.0%p(2005~2010년)→ -1.5%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중년층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4.4%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4%p로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거의 없었음
- 2011~2016년 중년층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2.1%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3.7%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1.5%p이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40~50대)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40~50대)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최근 5년(2011~2016년) 동안 60대이상 고령층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1.0% 증가하여 과거 5년(2005~2010년) 간 3.0%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증가폭 축소
- 최근 5년 동안 고령층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액은 2011년 157.1만원에서 2016년 165.3만원으로 연평균 1.0% 늘어남
- 이것은 2005~2010년 동안 고령층 가계의 소비지출이 129.1만원에서 149.5만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 고령층 가계의 소득변동 효과는 4.4%p(2005~2010년)→2.7%p(2011~2016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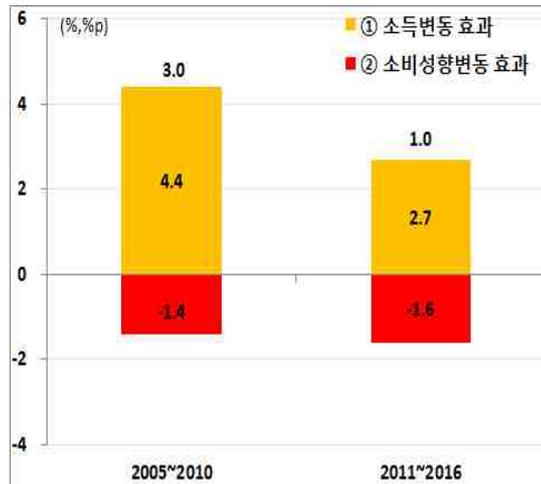
- 비성향 변동 효과는 -1.4%p(2005~2010년)→ -1.6%p(2011~2016년)로 변화
- 2005~2010년 고령층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3.0%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4.4%p 였으나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1.4%p로 컸음
  - 2011~2016년 고령층 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인 1.0% 중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가 2.7%p인 반면 소비성향변동 효과는 -1.6%p이었음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액(60대이상)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소비지출변동 기여도 분해(60대이상)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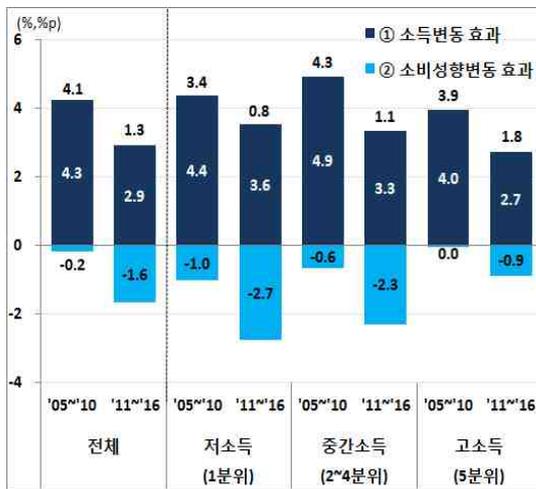
##### 1) 종합평가

- 최근 가계의 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은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청장년층과 고령층 가계에서 효과가 컸음
- 최근 가계의 소비가 부진한 것은 가계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한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균소비성향 하락 현상이 컸기 때문
  -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2005~2010년 4.1%에서 1.3%로 낮아짐
  -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기간에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유지되었지만 최근 5년간 소비성향이 급락하며 전체 소비지출을 끌어내림

- 전체 가구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005~2010년 -0.2%p에서 2011년~2016년 -1.6%p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 최근 가계 주거비 부담 확대, 고령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전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매우 컸음
- 저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 중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1.0%p에서 2011~2016년 -2.7%p로 크게 확대
  - 중간소득 가구의 2011~2016년 소비성향변동 기여도는 -2.3%p였으며 고소득 가구는 동기간 -0.9%p로 아직 크지 않았음
  -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들이 주거비 부담, 소득불확실성, 고령화 심화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판단
- 중간소득(2~4분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며 소비지출이 위축된 측면이 강함
- 중간소득 가구는 2005~2010년 중간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상승률이 연평균 4.3%에서 2011~2016년 1.1%로 크게 둔화
  - 소득변동 기여도가 과거 5년간인 2005~2010년 4.9%p로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1~2016년에는 3.3%p로 크게 낮아짐
  -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있는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연령별 특징을 살펴볼 때 과거에는 소비성향 감소효과는 고령층(60대이상) 가구에서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청장년층(30대이하), 중년층(40~50대) 등 모든 연령대로 확산
- 고령층의 경우 과거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소비성향 하락이 소비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
  -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과거에는 소비성향변동 효과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5년간에는 기여도가 각각 -1.9%p, -1.5%p로 확대
  - 고령화로 인한 노후부담이 점차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장년층과 중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누증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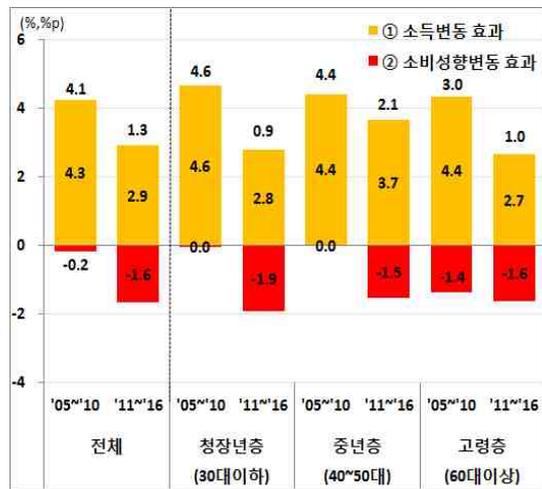
- 청장년층(30대이하) 가구는 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나며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락
  - 청장년층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율이 과거 5년간(2005~2010년) 4.6%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나 최근 5년간(2011~2016년)에는 0.9%로 가장 낮아짐
  - 소득변동과 소비성향변동 기여도 모두 소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 가계 소비지출 변동 기여도 분해(소득수준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가계 소비지출 변동 기여도 분해(연령별) >



자료 : 가계동향조사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2) 시사점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뿐 아니라 최근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노후 및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누증, 주거비 부담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

첫째, 노령인구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 복지 및 고용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특징이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로 분야를 발굴
  -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작업 환경에 관한 파악과 작업의 난이도 분석이 필요
  - 적절한 근로 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고령자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
  - 이외에 고령자를 상대하는 근로 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을 기대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 비중을 높이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
  -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소비 여력을 확대
  -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
- 저성장 기조 지속과 산업 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장하여 실업 후에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업 후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매칭 제도 개선을 통해 구인·구직기간 단축

셋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 채무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속하여 가계 채무부담을 경감
  -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투기성 대출로 인한 채무부담의 급증을 막고 중금리 대출 및 전환대출을 활성화하여 고금리로 인한 채무부담을 경감

-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금리 인상 시 채무부담 급증을 방지

-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

- 가계부채에 대한 급격한 억제로 성장잠재력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단계별 연착륙 유도

넷째,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안정을 유도하여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

-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
-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
- 부동산시장의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

-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주거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

-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이자 비용 부담 축소 등으로 주거유지비 부담을 완화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용자 자금 확대 등을 고려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김천구 연구 위원 (2072-6211, ck1009@hri.co.kr)